

주요 경제 정책 및 이슈

(1996. 4. 20~5. 20)

4. 20

중시안정기금, 5월 3일 해체

- 현금, 채권 등 1조 2,834억 원의 자금을 8월 말까지 624 개 출자사에 배분
- 4조 1,434억 원 어치의 주식 가운데 20%는 1998년 5월까지 출자사에 반환

4. 23

해외건설업협회, 「해외건설투자기금(GPIF)」을 11월 설립

- 국내 건설 업체가 국제 인프라 건설 사업을 발굴 수주하기 위해 8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연내 설립
- 기금 설립 후 5년 이내에 5,000~8,000억 원 규모로 확대시킬 계획

4. 24

재정경제원, 소득세법 개정안 마련, 1월부터 소급 적용

- 근로소득세 세액 공제 확대(산출세액 50만 원까지 20% → 45%)
- 퇴직소득세 공제제도를 신설하여 50% 감면

4. 28

재정경제원,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 및 소액 주주권 강화 방안 검토

- 민영화되는 공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사외이사제를 도입하고,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증자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혜택 부여
- 기업체 이사 선임에 소수 주주의 이사 선임권 강화

5. 2

재정경제원, 금융 기관 합병 지원 강화

- 금융 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 기관의 매수·합병에 세제 및 금융 상의 지원 확대
- 증시 침체로 미루어온 은행 등 금융 기관의 증자를 7월부터 단계적으로 허용

정부, 금융 기관 신규 참여 제한 완화

- 은행, 증권, 투신, 보험업 등에 대한 대기업 그룹의 신규 참여 제한 완화
- 신용카드, 리스, 할부금융회사는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출 경우 설립 자유화
- 창업투자자와 투자자문사의 등록 제한도 대폭 완화

5.3

건설교통부, 2001년까지 산업 단지 4,200만 평 개발

- 호남 지역의 1,330만 평을 비롯, 전국적으로 4,200만 평의 공업 단지를 개발 보급
- 수도권 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수원·경기 지역을 개발하여 서울 지역의 공장 이전 유도

5.7

국가경쟁력기획단, 경제 법령의 불합리한 규제 조항 중 3,300여 건을 폐지

- i) 법률적 근거없이 고시나 훈령 등 하위 규정에서 규제하는 경우, ii) 표현이 애매한 경우, iii)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경우 등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
- 1996년 상반기 중으로 해외 증권 발행 자격 제한 등 600 건, 1997년 상반기까지 경제 부처의 인·허가 신고 등 2,700 건의 규제 조항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투명성 제고

5.13

재정경제원, 국내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앞당겨 개방

- 학원, 인력 공급업, 시내 버스 운송업, 변호사업 등 28 개 업종을 추가로 1997년 개방
- 1997년 66 개, 1998년 11 개, 1999년 6 개 업종으로 단계적 확대 개방

5.14

재정경제원, 투자신탁회사 설립에 관한 인가 기준 마련

- 11위 이하의 대기업 집단 소속 증권사들은 출자 지분이나 주주 구성에 제한없이 투신사 설립 자유
- 증권사는 1996년 6월 이후, 은행·보험·개인 소유의 투자자문사는 1997년 이후 투신사 설립 자유

5.16

중소기업청, 중소기업 금융 지원 협의안 마련, 7월 시행

- 정책 자금 대출금의 연체 금리 2%포인트 인하
- 자동화로 구조 개선 사업을 벌이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1억 원까지 운전 자금 지원

5.17

재정경제원, 「외국환 관리 규정 개정안」 앞당겨 시행(1997년 → 1996년 6월)

- 해외 이주비 한도를 철폐(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달러 초과시에 한해 한국은행 허가)
- 기업들의 해외 사무소 경비 지급 한도, 은행의 해외 점포 설치 및 업무 제한 폐지
- 기관 투자자의 해외 예금,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 대출 전면 자유화